

‘미투’ 건강한 공직사회 방향 제시

전주시, 청원공감한마당 행사 개최 김혜영 군산성폭력상담소장 특강·공직선거법 특별교육 진행

쏟아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주시가 직원들과 함께 건강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지난 30일 덕진예술회관에서 시청 공무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중 청원 공감한마당 행사를 열고 미투 운동의 의미와 미투 운동이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먼저 김혜영 군산성폭력상담소장이 강사로 초청돼 ‘쏟아지는 me too, 내일을 위한 change up’을 주

제로 △공직사회에서 주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 사례와 예방방법 △내일을 위해 변화되어야 하는 공직사회의 방향제시 등을 소개했다.

김 소장은 “공직사회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공직사회의 권력형 성범죄 등은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관심을 통해 공직자들의 성평등·성인지,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는 현재 직장 내 ‘미투’ 운동과 관련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 신원보호도 강화하고 있다.

또 청원 공감한마당 행사에서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박종범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의 공직선거법 특별교육도 진행됐으며 참석한 직원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공무원으로서 선거중립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밖에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출산장려 홍보영상과

생태도시 전주시 구현을 위한 ‘전주 두 바퀴 이야기’ 홍보영상도 상영됐다.

민선5기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최근 미투 운동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는 주로 한국 사회의 잘못된 남성 우월적 풍토와 상명하복의 수직적 계급 사회에서 발생했다”면서 “이번 특강은 물론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불합리하고 권위적인 관행 문화를 개선하고 건강한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맞춤형 산림교육 프로그램 무료 운영

전주시, 4월부터 눈높이 숲체험교실·유아숲교육 등

전주시는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산림교육 서비스 운영업체가 확정됨에 따라 4월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숲체험 교실에서는 숲 생태에 대한 교사의 눈높이 해설과 숲속 자연물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자연이 주는 혜택과 소중함을 배울 수 있다.

숲체험 교실은 숲 해설가 2명이 참여해 생태 숲체험, 생태습지체험, 야생화체험 등 숲 체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생태 숲체험의 경우 울해 완산철봉 삼나무·편백림과 학산, 황방산, 모악산, 건지산 등에서 진행되며, 생태습지체험은 완산철봉 생태습지, 건지산 오송재, 한국도로공사 수목원 등에서 펼쳐진다. 또 자연생태체험학습원과 한국도로공사 수목원에서는 야생화 체험도 진행된다.

/채규남 기자

또 찾아가는 숲 해설 서비스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건강 숲체험은 건지산 편백림과 모악산 탐방로에서 진행되며 △딱따구리의 흔적을 찾아라 △탄소를 먹는 나는 누굴까 △도토리까 들러주는 노래 △검은 어려움보다 얻는 즐거움이 많다 등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특히 울해부터는 인후공원에 조성되는 유아숲체험원에서 유아숲지도사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유아숲체험원에는 △자연관찰시설 △통나무건너기, 나무정글짐, 소꿉놀이, 사각그네 등 체험놀이 시설 △아이들의 좋아하는 잠자리 의자, 고래터널, 기차놀이, 피노키오 의자 △교육 공간을 위한 숲교실과 숲체험장 등이 조성됐다.

울 해반기에는 유아숲 체험원 1곳을 추가 조성해 유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인권센터, '분야별 네트워크 초청 간담회' 완료

전주시가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성과 장애인, 아동, 청소년, 노인 소수자 등 각 분야별 인권단체와 협력한다.

시는 전주시 인권센터는 지난 30일 센터(서노송동 현대해상 8층)에서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등 10개 소수자 단체와 간담회를 갖는 것을 끝으로 3월 한 달 간 이어온 '2018 분야별 네트워크 초청 간담회'를 모두 완료했다.



전주시와 전주시 인권센터는 지난 30일 센터(서노송동 현대해상 8층)에서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등 10개 소수자 단체와 간담회를 갖는 것을 끝으로 3월 한 달 간 이어온 '2018 분야별 네트워크 초청 간담회'를 모두 완료했다.

3월 초청 간담회는 한 달 간 8회에 걸쳐 여성인권과 아동인권, 장애인인권 등 8개 분야의 85개 인권단체를 분야별로 초청하여 인권센터 소개 △전주시 인권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목표 설명 △인권지역현안 공유 △네트워크 구축을 논의했다.

이날 소수자 단체 및 관련부서 담당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센터 소개와 단체별 인사, 분야별 지역 현안문제 논의 등 사람중심의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 이해와 열린 소통의 시간이 진행됐다.

양 기관은 한 달 간 이어진 이번 릴레이 초청간담회를 통해 △인권센터의 업무 추진방향 △전주시 맞춤형 이주민 정책 필요성 △분야별 인권문제 개선방향 △지역 네트워크 형성 필요성 등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 개진과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향후 분야별 간담회와 인권특강을 병행하는 등 인권행정 구현 방법과 실천 방안 가이드라인을 제시,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민간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채규남 기자

구독문의 288-9700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한밤중에도 인터넷으로

전주시, 4월부터 대형폐기물 24시간 인터넷 배출신고 제도 전면 시행

앞으로 전주시민들은 한 밤중에도 인터넷으로 신고만 하면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전주시는 대형폐기물 배출 시 행정기관의 근무시간에만 전화로 접수받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방식을 4월부터는 인터넷 신고방식과 병행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연중 24시간 운영되는 인터넷 신고방식이 도입되면서 대형폐기물 배출에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이 야간이나 휴일에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배출신고부터 처리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방식은 배출자가 거주지에 따라 완산·덕진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배출품목과 배출장소, 배출 예정 일자를 입력한 후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수수료를 결제하고 납부필증을 인쇄해 품목별로 부착하면 된다. 또는 담당공무원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하고 휴대용 프린터를 이용해 납부필증을 출력·부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이사철과 신규아파트 입주시점에 대량으로 대형폐기물이 배출되는 만큼 아파트 관리사무실이나 경비실에 신고할 경우 일

괄적으로 인터넷에 등록하면 신속한 수거가 이뤄진다.

그동안 시는 장릉과 소파, 매트리스, 사무용품 등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해당 구청에 전화로 접수하면 담당공무원이 출장해 스티커를 부착하고 배출자가 수수료를 납부하면 수거업체에서 수거·처리하는 방식으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처리해 왔다.

하지만 지난 해 전주시민들이 배출한 대형폐기물은 총 1만 2129톤에 달하고 월평균 2600건 정도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접수받아 현장 확인 후 수거해야 했던 관계로 처리기간이 5일~7일 정도 소요됐다.

/채규남 기자

경찰청, 약촌오거리 사건 수사 사과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경찰청은 부실·강압 수사가 있었음에 유감을 표하고 유족과 재심청구자 최모(당시 15세)씨에게 사죄했다.

경찰청은 30일 '약촌오거리사건 유죄확정에 따른 경찰청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약촌오거리 사건 처리의 경찰 잘못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발생 당시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중심 수사원칙을 지키지 못한 부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며 "가쪽을 잃은 범죄로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당시 경찰이 진범을 검거하지 못해 아픔을 감내해 오신 피해 유가족들께도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무고한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한 경찰수사시스템 개선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라면서 "수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미비점을 발굴해 개선하는 등 경찰수사 개혁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성민 기자

농협에 벌금 대납 지시 의혹 조합장 입건

김제의 한 농협 조합장이 농협에 자신의 벌금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김제경찰서는 3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제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 최모(5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월 김제시 만경읍의 한 논에서 트랙터 작업을 벌이던 A(27)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400만원의 벌

금을 선고받아 이를 지난 9월 해당 농협이 최씨의 벌금을 대신 납부해 문제가 불거졌다.

조합원들은 이러한 최씨와 직원들의 문제가 조합에 손실을 끼쳤다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고발장을 접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씨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 오래 가지 않아 수사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